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비 서둘러야”

한일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동양대학 다카노 타츠야키

일본 개호(介護)보험제도시행 10년의 현황과 문제점

1970년 고령화율 7%, 1994년 14%에 이르면서 인구고령화(65세 인구의 비율)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의 현황은 2008년 기준으로 노년인구비율 약 22%, 합계특수출생률 1.37, 남성평균 수명 79.59세, 여성 86.44세, 평균세대인원 2.62이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와 동시에 가족 규모의 축소, 고령자 부부만의 세대나 고령자 단독 세대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동시에 일본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제도·정책이 지방 분권화에 따른 기초자치체를 단위로 구성돼 복지 서비스에 대한 공적비용을 이용하면서 민간 사업자의 참가를 촉구하는 시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개호제도는 고령화 개호에 대한 사회적 지원, 고령자 본인에 대한 선택, 재택간호 중시, 케어 예방·재활 치료 충실, 시민의 폭넓은 참가와 민간 활용 등이 기본이 됐다.

2000년부터 시행된 개호보험제도는 2006년 대폭적인 수정을 맞았다. 케어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을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후 예방 차원의 보살핌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개호보험 재원은 국가에서 50%, 본인이 50%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개호보험제도 시행 후 고령자 개호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일본의 고령자 개호 서비스는 행정기관과 사회복지법인만이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됐지만, 민간사업자에게도 개방되면서 지역 내 많은 서비스 사업자가 생겨났다. 그 가운데 영리법인의 비율은 2000년에 약 30%였던 것이 2009년 55%로 늘었다.

고령자의 존엄을 중시하는 의미에서 소규모 케어도 중시됐다. 치매그림 흡에서는 개인실이 기준이 됐고, 9명 정도를 1단위로 삼아 개별성을 중시한 개호가 이뤄지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을 집단으로 한 케어가 아니라 개별성을 중시하는 개호가 중시됐다. 다만 이로인해 거주비 등 이용료가 늘어 저소득층에서는 이용이 어렵게 됐다. 또 전문가에 의해 계획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개호지원 전문가의 양성과정이나 역량이나 전문성에 대한 의문도 높아지고 있다.

개호보험제도는 시행 10년된 지금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개호보험으로 인한 급여비가 2000년 3조 6000엔에서 2008년 7조 2000엔으로 증가했다. 또 외상 및 식물인간, 치매 등 요보호자(要介護者)가 증가하면서 예방차원의 정책이 더욱 중요시 됐다. 제도적으로 재택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중증환자나 종말기를 보내는 이들을 위한 재택 지원체제가 불충분해 시설입소 희망자만 늘어났다. 종사자 확보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 다른 직업에 비해 수입이 적어 젊은 종사자들이 떠나고 있다. 또 봉사자들의 노인 학대 증가, 저소득자의 부담 증대, 치매 고령자에 대한 대책 불충분, 산간지역이나 낙도 등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서비스 부족 등은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앞으로 일본개호제도는 재택서비스를 집약적·효율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고령자 주택을 늘려 고령자 집단 거주방향을 이끌어나가고 고령자의 개별·소규모 케어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루터대 복지재활대학원 이선영

한국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1차 한·일 노인복지 국제세미나

저출산, 고령화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일본, 러시아 유럽 등에 이어 우리나라도 그 대열에 들어섰다. 국가차원에서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정책 집행을 위한 재정조달 방법을 비롯해 그 실효성은 여전히 의심스럽다.

연꽃마을(이사장 각현),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회장 각현)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를 주제로 제1차 한·일 노인복지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시행 2주년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점검하고 우리보다 8년 앞서 시작한 일본의 개호보험과 비교 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행사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일본의 개호보험의 전철을 밟고 있는 만큼 다양한 대안이 도출됐다.

각현 스님은 개회사에서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를 경험하고 있고, 개호보험(노인보험)도 10년 넘게 진행돼 왔다. 일본의 노인복지 정책과 복지 현장을 통해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노인운동 CD를 제작해 120개 경로당 약 1440명 어르신에게 시행해 노인 건강증진에 힘쓰고 있다.

한국은 사회보장제도시행 역사가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짧다. 충분한 준비 기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5대 사회보험제도의 하나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된 지 2년이 됐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시설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22만여 명(2009년 9월 집계)이 보험에 들어 방문 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들 서비스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90%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건강상태 호전은 물론 가족부양부담도 경감되고 있다.

또 개인·영리기업도 장기요양기관운영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 공공주도형 서비스 공급시스템에서 다원적 공급시스템으로 일차리 창출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적인 평가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시민과 노동계는 급여 대상자를 중심으로 제한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보험비의 80%가 본인부담으로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은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 또 비영리 법인의 정채성 혼란, 운영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방적인 등급판정, 전문성 부족, 일방적 운영, 변별력 실패 등을 지적받고 있다.

또 2009년 45만 명의 요양보양자가 무차별적으로 양산되면서 열악한 처우, 허위 및 부당청구 등이 만연하고 있다. 주요 쟁점으로는

적용대상자에 장애인 배제된 점, 요보호인정범위가 제한된 것이다. 절대적인 시설인프라·공적 인프라의 부족과 지역 간 시설 인프라의 불균형도 지적 받고 있다.

중앙정부의 인프라 정책 실패로 적정수의 8배가 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난립해 기관간 과다 경쟁과 편법행위가 성행하는 문제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설치시 허가제 강화, 기존기관에 대한 현실조사 강화, 지역별 장기요양수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설 수요의 5~10%를 공공부문에서 소유·운영하면서 공공부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설 인프라가 현저하게 부족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공공부문에서 시설을 소유하고 민간에 운영위탁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요양보

호사 인력양성 및 운영부실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허가제 전환의 엄격한 원칙적응과 감독, 교육과정 수료 후 국가자격시험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환경도 보완해야 한다. 임금, 불안한 고용형태, 서비스 수요의 불만에 대응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장기요양보험제도안에서의 책임도 명확해야 한다.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이에서 공공분야에서 책임성에 대한 애매한 법률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시설 내 학대와 관련해 약물사용 등에 관한 조항은 아직 명문화되지 않았다.

특히 재가서비스의 제공, 지역주민의 참여,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의료보건복지연계서비스 등 지역주민과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참여와 책임이 배제됐다. 행정관리, 행정적 효율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tip: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국가차원의 사회보험제도이며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질환을 가진 64세 이상이 대상이다. 소득과 상관없이 중증(1~3급)의 요보호상태의 판정을 받아야 급여서비스가 제공되며 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부담으로 운영된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서비스가 있으며 시설 급여는 노인의 의료복지시설에 수급자가 입소해 신체활동지원, 기능회복훈련을 제공 받을 수 있다.

건강한 노년생활 만들기

동양대 스키 테츠로

노화에방에 운동이 효과를 주는지 불분명

신체기능의 노화와 운동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 되고 있지만 그 기능이 수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는 지속적인 연구대상이다. 신체운동은 노화에방이 된다는 연구가 많다.

하지만 신체 운동 시 급사하거나 뇌졸중, 심근경색 등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 또 신체운동은 활성산소의 발생을 일으켜 수명을 저하시킨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노화에방에 반드시 운동이 효과를 가져 온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지만 적당한 운동을 실시하면 노화에방에 효과가 있으리라고 본다.

동양대 요네다 이꾸오 등

고령자의 사회참가를 위한 인프라 정비

고령화사회에서는 사지의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라도 안전하고 편하게 외출할 수 있는 인프라 정비가 중요하다. 모든 사람에게 편안한 도로정비 등의 사업과 신체가 부자유스러운 사람들을 위한 이동지원 기기의 정비 두 가지가 있다.

지팡이, 보행기, 휠체어 등이 대표적 기구다. 일본에서는 보행기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를 위해 낙상위험이 적고 하지를 움직이면서 안전하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휠체어와 자전거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이동 지원기구를 개발 진행하고 있다. 또 휠체어나 유모차 등의 이동지원 기구를 사용하는 사람도 ‘걷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생활주변 도로 정비 등 사회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

고령자의 외출 기회 증가는 신체·건강의 촉진은 물론 개호 예방 효과, 의료비나 개호비용 절감, 고령자의 소비의욕 증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가능하다. 고령자가 사회에 참여하기 쉽도록 하는 인프라 정비는 사회의 여러 가지 면에서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강남대 홍승연

고령자 기능별 맞춤형 건강운동관리사 파견사업

기존 노인운동사업은 기관 간 비효율적 중복운영, 노인운동전문감사 설비의 한계, 장기요양보험 등급발탁자에 대한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노인운동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제3의 조직 요구, 2010 서비스 건강관리법 시행여부에 따른 사전 바우처(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파우의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지출을 보증하여 내놓은 전표)사업으로서의 성과 평가로 이뤄졌다.

노인운동사업은 용인시 거주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2009년 기능별 맞춤형 건강기능관리 서비스를 강남대 강남실버건강청년사업단, 보건복지가족부 청년사업단 지원 사업, 경기도 용인시 등에서 함께 진행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제공인력 창출과 함께 노인의 건강으로 참여 어르신의 기능 및 심리, 생리 지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정리=이성연 기자 un82@buddhapia.com

The World Zen Buddhist Culture Exchange Federation, Incorporated Association
社團法人 世界禪佛教文化交流聯盟

G20 성공개최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세계선불교 문화교류 대법회

우리는 본래 부처입니다. 자기를 바로봅시다.

초대합니다.

초청인

살아있는 부처님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선불교문화교류를 통하여 인류평화를 지향합니다.

본 연맹에서는 세계 각국의 선지식을 갖추신 고승대덕 스님을 모시고 G20성공개최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세계선불교문화교류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무루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스님50여명, 국내스님500여명, 불자회원3500여명 참가예정)

- 일시 : 2010년 09월 27일 월요일 13:00부터
- 장소 : 부산광역시 KBS 문화홀 특별법석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63번지 KBS홀)
- 주최 : (사)세계선불교 문화교류연맹
- 주관 : (사)세계선불교문화교류연맹 봉행위원회
- 후원 : 불교TV방송,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일불신문사 (사)세계불교평화재단 황정사, (사)6.3동지회청년봉사단 (사)대한불교범종단원로지도자연합호국국사단

- 총 재: 영공 도성 (진)해인사 주지, 현 태종대 태종사 회주)
- 명예총재: 대 원 (중국 육조사 방장, 호국국사단 명예총재)
- 부 총 재: 혜 철 (사)한국불교원각종종정, 호국국사단 명예총재
- 의 료 (사)한국근본불교조계종 창종주, 전국일불문도회중앙회장)
- 이 사 장: 해 공 (영천 충효사 회주, 호국국사단 명예총재)
- 이 사: 무진본, 동봉, 윈덕, 능인, 혜산
- 대 회 장: 동 봉 (조령산 흥천사 조실, 호국국사단 내무부총재)
- 부대회장: 해룡 박지곤 (사)세계선불교융합종, 융합사 창종주)
- 봉행위원장: 황 정 (사)세계불교일화종 종정)
- 봉행부위원장: 혜련 (부산 천불암 주지), 윈주 (울산 무상사 회주)
- 준비위원장: 만 주 (한국불교대불종총무원장)
- 집행위원장: 이봉 서병열 (일불신문사 발행인 겸 대표)
- 사무총장: 와룡 김대식 사무처장: 금당 배성복

- 봉행위원: 해운(달마정사), 청운(춧불암), 청타(관음정사), 청정(윈덕사), 청정심(대법사) 지건(비마사), 법정(법정사), 지원(현사장), 선행심(약천사), 수안(삼불정사) 연화심(미륵암), 청연행(전룡사), 자문(자문사), 모선(성불암), 혜덕(문수암) 혜성(보리암), 보성(보성사), 불두화(수월정사), 청정심(대법사), 수월(락서암) 불심행(영선암), 보성(무학사), 수인(무학사), 해원(수덕사), 고담(불지사) 관연(광천사), 해룡(해룡정사), 해빈(수월사), 지광(무상사), 성담(용곡사) 외 2백사암